
第11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10月22日(金) 午後4時

議事日程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 1面

(16時 12分 開議)

○議長 金箕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特別市議會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議長 金箕英; 의사일정 제1항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은 세 분 議員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議員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環境水資源委員會 金鍾來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 議員; 존경하는 金箕英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高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집행부 關係公務員 여러분, 環境水資源委員會 委員長을 맡고 있는 金鍾來 議員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찬 수확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하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에는 직할 하천 3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31개소로 총 35개의 하천에 57.8km²의 면적과 237.7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총 면적 60만km²의 만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계속되는 하천복개정책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잠식되고 사라져 버려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수자원의 부족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산림녹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식목일, 또 육림의 날이 있고 山林廳이라는 국가기관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 동안 도심지의 여유공간 확보와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와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환경 생태계의 파괴, 또 우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도시지역의 사막화, 또 건조화 현상으로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래없는 무더위와 홍수로 유아와 노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이 평년보다 수배 이상 발생하는 등 시민건강 유해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부분 복개한 일부 하천마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원상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내부순환고속도로 홍제지점에 있는 복개하천에 건축된 불법 건물인 유진상가를 사들여서 이를 원상 회복시키지 않고 행사용 시민홍보용 건물로 활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을 단순한 물길 정도로 인식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나 호안을 쌓고 심지어는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아예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는 반환경적 개념하에 관리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생태계가 발원하는 근원이며 또한 국민들의 생활공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수생동·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하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맑은 물 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環境部도 '86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하천 환경관리사업에 착수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연간 약 250억원, 지방비 포함해서 4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건물인 복개하천에 불법 건축된 유진상가를 헐어내서 원상회복시켜 홍제천의 자연 하천화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로서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청계천의 원상회복을 本議員이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도심의 가장 중요한 하천인 청계천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복개정책의 추진으로 하천의 28%인 69.3km와 또 구거를 포함한 지천의 24.5%인 481km를 복개해서 도심의 건조화로 여름철에는 열대야 현상과 유행성 전염병과 모기서식지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어릴 때 뛰어 놀던 시냇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추억을 물려주는 것이 지하철 몇 km를 깔고 또 고가 도로 몇 m 놓는 것보다는 더욱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市長, 청계천은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을 통하여 21세기형 도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기 지하철에서 하루 4만 3,000톤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으며 또 현재 3호선 경복궁역, 종각역, 종로3가역, 을지로역, 또 5호선 광화문역 등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만으로도 청계천의 건천화 방지와 또 1급수에 가까운 지하수로 하여금 하천자정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계천이 건설된 삼일고가도로도 그 수명이 다하는 시기를 택해서 안전도 등을 고려해서 뜯어내고 복개도로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교통난은 가중되겠지만 그 불이익보다는 훨씬 큰 이익이 나타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서울시는 수락산 계곡물을 상계동까지 연결해서 수경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계천도 원상회복을 시켜서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놓으면 청계천이야말로 쾌적하고 청량 있는 도시환경을 이룩할 것이라고 本議員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서울시는 오히려 보수하여 사용하려는 단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高建 市長께서는 서울의 명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에 남는 市長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특정 자치구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이 노원, 강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특정지역에 대규모의 영구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의 집중건립 이전인 92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8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 또 92년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62%이었는데 금년 49%로 무려 13%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일반 청약자 이주에 따른 공가 발생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순위 1위인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저소득주민이 집중됨에 따라서 현재의 획일적인 저소득주민 지원 부담 기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하에서는 자치구 부담이 급증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구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으며,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재산세 등 세수입 결손과 복지비 부담증가라는 이중적 부담으로 자치구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주민 지원부담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보다 오히려 2배 내지 3배 많은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혜택 또한 서로 달라서 자치구의 형평상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역의 슬럼화현상,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또 저소득주민의 생계수단인 취로사업비도 자치구 부담으로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취로일수도 서로 달라서 저소득주민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주민 특정지역 집중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균형 발전된 서울의 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치구별 분산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저소득주민 집중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한 조정교부금 산정에 단위비용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부담을 폐지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터널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원인규명을 해서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작업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벽이 붕괴되면서 작업인부가 매몰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사건현장은 70년 12월에 준공된 남산2호 터널입니다. 수명이 100년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 현장소장은 사고원인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원인이었고 또 내벽을 뜯어내자 곧바로 붕괴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뜯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뜯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림공사, 또 부실공사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서울시 공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또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3호 터널은 어떻습니까? 차량매연 등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터널에서는 콘크리트가 중성화 현상이 발생해서 10여 년 전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으며, 종로구 구기터널이나 또 성동구 금호터널 등도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중성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산 3호 터널은 내부에 콘크리트나 철근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서울시는 부분공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면보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산2호 터널도 원래는 부분적인 보수만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전면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조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조사 및 방재대책에 있어서도 남산3호 터널은 중성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분공사보다는 전

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터널, 일반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97개소 중에서 도면이 없는 시설물이 무려 27개소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7개소 시설물이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서울시 도시시설 관리개념이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市長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8일 개정된 建築法과 관련해서 도시설계구역의 무대상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建築法에 따르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지구, 개발촉진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 등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는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고 2년 이내에 도시설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부칙에는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를 법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 불필요지역에 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방대한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작성에 따른 과도한 용역비가 들 것입니다. 또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앞에 닥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느 특정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걸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도시설계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법 개정 후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또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이 의결되어서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질 내용으로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사업진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보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또 매수 청구된 토지를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장기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로나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가히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별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온 사업추진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되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敎育監께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실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또 학교교육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요즘 많은 유능한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이 왜 교실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채 교단에서 시간만 때우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실하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개혁입니까? 선생님들 자신입니까, 또 학생들입니까, 학부모들입니까? 요즘 명퇴 희망자가 많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사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의 환경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학의 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선생님들의 사기 저하 및 교육포기 선생님들의 증가에 대한 책임을 교육학자 출신인 敎育監께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기 자식을 설득할 수 없어서 교육을 포기한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의 힘으로 성격도 다르고 또 가정환경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른 40~50명 되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동안 해방 이후 52년 동안 학교 교육질서가 유지된 온 것이 여러 가지 학교 내·외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의 회초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누구입니까? 인격적으로나 독자적인 판단능력이나 사회적인 책임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자율이라는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무질서, 방종, 심지어는 부모도 몰라보는 패륜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훈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또 훈련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강제성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회초리입니다.

성경에서도 미련한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데 회초리는 효과적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敎育監의 지침으로 초기에 일체의 회초리를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방종이 판을 치게 되었고, 또 통제수단이었던 회초리가 사라진 교실은 교실의 무질서가 속출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었고, 또 벌을 세워도 장난을 치고, 교사의 지시를 듣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육적 질서는 무너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후 학교장 재량으로 긍정적인 매를 허용했지만 이미 강독이 무너진 후에 삽으로 강독을 막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실의 붕괴는 오래 전에 있어온 것이 아니고 아주 최근의 일이며, 敎育監 재직시의 일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설문지 응답자의 60% 정도의 학생이 학교 무용론에 찬성하고 있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만 가지고도 敎育監께서 추진한 교육정책은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서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 맞지 않은 정책으로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敎育監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敎育廳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에서 통학하는 학생수를 보면 중학생이 약 6,000명, 고등학생이 2만 278명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정도, 고등학교가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만 줄일 수 있다면 중학교는 18개 학급수를 줄일 수 있고 고등학교는 406개 학급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만을 살펴본다면 36학급을 가진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11개 학교를 줄일 수 있으며, 또 교사의 수를 어렵잡아 2배수로 잡아도 약 800명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초임교사를 계산해서, 100만원을 계산해서 월 8억,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유입 억제정책의 하나로 학생들의 서울 학교로의 전학은 주민등록상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이 이주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서울 이외의 타 지역으로 진출하면 당연히 학생도 전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학을 때는 통제해 놓고 또 나가는 것은 통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서울 이외 지역에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만 서울학교에 남아서 과밀학급을 초래하고, 학생 1명당 소요되는 예산 및 복지혜택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敎育監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箕英; 다음은 行政自治委員會 閔庚燁議員 질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庚燁 議員;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구 출신 行政自治委員會 閔庚燁議員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市長,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서울시정이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한 지 벌써 1년 반, 서울시정은 아직도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市長께서 아직도 편의적 방식으로 관료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市長께서는 선거당시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항상 잊지 않고 사명감으로 시정개혁에 앞장서 달라는 축구를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高建 市長께서 시정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高建 市長 취임 후 올해 9월 말까지 일정을 보면 총 1,102건 중 업무 외 행사가 245건으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

고 업무행사 85건으로 총 일정의 30%인 330건이 행사에 다니는 것입니다.

각종 회의참여 294건, 언론과의 접촉 96건으로 행사, 회의, 언론과의 만남에 총 일정의 65%를 보내고 있고, 서민생활 방문은 단 9건에 불과한 행사시장, 회의시장, 홍보시장으로서의 전시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십시오. 행사보다는 행정을 중요시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室·局長 責任經營制 도입도 그렇습니다. 高建 市長께서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어느 시장 때보다도 실·국장들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제도에 지쳐 있습니다.

실·국장도 모르게 담당자에게 시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市長室을 통해 일방적으로 잡혀지는 시장과 민원인들의 면담으로 인해 실·국장들은 배석회의를 준비하느라 뒤늦게 전전공공해야만 합니다.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 대화한다는 시장의 토요일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장의 인기나 홍보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용역으로 검토중에 있는 도로를 어디에 내느냐에까지 시장이 주민들과의 면담일정을 잡아놓고 실·국장을 불러들이고 있는 지경입니다.

또 서울시에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큰소리 치시더니 高建 市長 취임 이후 각종 위원회가 66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달인께서 위원회시장으로 바뀌어 공무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책임질 사항은 모두 평상시 업무와 거의 무관한 소위 전문가들이 갑자기 소집되어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됩니

다. 실·국장들은 위원회에 책임과 권한을 빼앗긴 채 위원회 눈치를 보면서 일이 불만스러워도 진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장의 자세에 대해 실·국장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국장 책임경영제의 정착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최대의 현안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87년도에 松坡區 新川洞 일대 시유지 2만 6,000여 평을 롯데에 매각하더니 이 일대에 잠실 제2롯데월드 36층 고층빌딩 건축허가를 내주고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송파대로 왕복 4차 고가도로를 롯데가 전액 부담하여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松坡區廳은 최종적으로 지하차도 건설허가로 바꿨습니다.

이에 롯데가 작성한 교통량 조사보고서의 부정확성과 교통량 대폭 축소 의혹, 비현실적 잠실4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종합토지세 감면 의혹 등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특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한 번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 1월 구성된 인접지역 주민, 시민대표 1인씩만 참여한 16명의 교통특별자문단도 9월에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광역적 교통분

산대책 검토가 요구된다는 원론적 논의를 하고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5월 작성된 잠실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잠실지구 인접지역 개발계획 중 제2롯데월드와 엘그린 부지 빌딩 신축에 따른 발생교통량 PCU가 715로 전체 1,600의 45%를 차지하는 등 무분별한 대형 건축물 허가에 따른 교통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로 해당지역의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난 7월 인근 잠실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공람공고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의 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로용지로 5m를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또 96년 주민들과 용적률 285%를 합의했음에도 건교부 기준 400%와 서울시 조례 300%보다 낮은 공공용지 제외 270% 플러스 인센티브 15%의 용적률을 다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다 96년 건교부령과 98년 서울시조례에 의해 해제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평형 건축비율 30%를 지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자세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롯데월드 허가로 인해 발생된 교통혼잡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저밀도 아파트 건축에 대한 규제를 법대로 해제하고, 지금이라도 제2롯데월드 건축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약속한 교통량 재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롯데측과 이 일대 교통개선 도로시설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잠실지역 교통혼잡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하철도 건설문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진상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소재 유진상가 아파트 건물에 대해 방침을 계속 변경하는 등 줄속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1월 40여 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배관 및 내장공사를 하던 중 3월 11일 신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하더니 4월 1일에는 2003년까지 모두 철거하고 자연하천 복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인 4월 7일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서간 업무조율도 없는 줄속계획이 잇따라 발표됨으로써 행정력이 소모되고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에 문의해 본 결과 신지식산업센터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또 답을 받았습니다.

시장 스스로 유진상가 철거계획과 활용계획을 며칠 간격으로 각각 결재하였는데, 많은 문제제기에도 사과나 반성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는 1970년 주식회사 신성이 12억 5,000만원을 들여 하천부지를 복개하여 만든 건물입니다. 신성은 당시 아파트 A·B동 185세대를 분양하여 분양금을 모두 챙기고 1층 상가 2,400평은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씩 40~50억의 보증금에 임대료로 연간 수천만원씩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챙겨왔습니다.

河川法 제33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복개구조물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는 당시의 점용허가서상에 점용기간, 점용료 등을 명시하

지 않아 20여 년 동안 점용료 한 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분양금과 상가임대 수입을 모두 가져간 주식회사 신성에게 32억에 달하는 아파트 보수공사를 맡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8월 서울시 수의계약 심사의뢰에 대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을 재검토하도록 안전을 반려했음에도 서울시는 타인 소유 점유물 내 공사시행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성과 기필코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유진상가에 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에만 들어간 돈이 보상취득비 153억, 상가 B동 철거비 26억, 상가와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비 7,400만원, 설계비 1억 2,800만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3,000만원, 보수공사비 32억 등 총액 213억에 달합니다. 여기에 만약 서울시가 지상권 갱신을 거부한다면 보상취득비가 또 막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에서는 유수지·하천의 복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수지를 복개상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하지만 홍수 및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의계약의 이유로 안전상 긴급한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이유라면 유진상가는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유진상가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한 마디로 부패, 밀실, 졸속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사 수의

계약은 지금까지 신성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하고 부당한 권한을 준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무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시공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시켰다는데, 시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진상가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모든 지적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그 주변 유통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上岩洞에 건설중인 서울월드컵 축구경기장의 건설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전체적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기일 내에 부실 없이 경기장이 건설될 것인가라는 우려의 소리들이 많은데 서울시의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정률이 17.6%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2월 29일 토목, 조경분야 설계변경으로 6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장은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산출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고, 예산은 당초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2만 2,000여 평에 달하는 3개의 대형물류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8년 경기장 부지 앞 자원회수시설 4,900평을 마포구에 빌려줘 5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달 뒤인 작년 5월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사업을 위해 경기장내 당초 4,158평 설계를 바꿔

8,289평의 대형할인매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월드컵경기장에서 불과 1.5km 거리인 상암택지개발지구 3공구에 국고지원을 받아 1만 2,000여 평의 서북권 물류센터를 월드컵 개최 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에 수천억을 들여서 연간 36만 4,500톤을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이 물량을 다 소화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변에는 그랜드마트 신촌점, 그레이스백화점과 마포구 시장 12곳을 포함해 유통시설 4만 4,310평이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표2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일대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중복투자, 과잉공급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물류센터 집중은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월드컵경기장 근처 유류기지 이전문제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서쪽에 위치한 석유비축기지는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합니다. 석유비축기지는 78년 시유지 5만 7,000여 평에 국고지원금 26억원으로 반지하탱크 5기 30만 8,000배럴을 비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82년 한국석유공사에 관리재산권을 넘겨 3년마다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마땅히 임대료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적반하장으로 석유비축기지 이전 대토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만약 대토 제공시는 지방재정법대로 재산 임대료를 받아

야 할 것이며, 이전비용 또한 석유공사가 부담토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복권은 95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 조성을 목적으로 즉석식 복권 600억어치를 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간 복권 인쇄비로만 125억 5,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 미판매량의 발행인쇄비가 44.1%를 차지하여 5년간 54억 2,000만원입니다. 복권 전체 수익금이 99년 9월 현재 222억원에 불과한데 판매되지 않아서 버려져야 하는 복권 인쇄비가 54억원입니다. 표 3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치복권 미판매량의 폐기량이 95년, 96년에는 100%였는데 97년에는 3.9%, 98년에 78.1%밖에 안 된 이유와 폐기하지 않은 복권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해명을 바랍니다.

자치복권은 발행시부터 주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복권 발행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감독책임도 크지만 복권발행협의회와 인쇄업자 간의 결탁에 의한 부당이득의 제공 의혹이 큽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자치복권 발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치복권 판매율은 평균 57.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행액 대비 당첨금 지급도 26.9%에 불과합니다.

이제 발행액 대비 수익금이 초기 전국 자치복권 발행 승인 규모의 30%보다 점점 떨어져 지금은 18.3%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복권 구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권수익 현황을 보면 95년에는 84억, 96년에 88억, 97년에 26억, 98년에는 20억원, 99년 9월 15일 현재 3억 1,700만원으로 총 22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판매수익 적립금은 시·도별 지방 문화행사 지원금 등을 제외하고는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적립토록 정해져 있고 사전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97년, 98년간의 수익액인 2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억원을 채우려면 앞으로도 4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년 후에나 겨우 사용이 가능한 복권발행을 이대로 계속해야만 합니까? 예산·행정낭비에 저소득층의 사행심만 조장하는 자치복권 발행 중단에 시장님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로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高建 시장님, 개혁의 시대에 서울시는 인기행정, 선심행정을 타파하고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기 위주의 선심행정과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국가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시장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書面質問)

○閔庚燁 議員;

다음은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풍납토성은 많

은 학자들에 의해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1963년 1월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풍납토성은 2,000여년 전 한성백제의 초기 도읍지의 유적으로 서울시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풍납토성 인근에 있는 방이동고분군, 암사선사주거지, 석촌동고분군, 몽촌토성 등 4개 문화재가 국고보조를 받아 복원사업이 이미 '90년에 완료된 것과는 달리 풍납토성에 대한 복원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송파구 풍납동 72번지 일원 풍납토성을 '93년부터 '97년까지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2002년까지 복원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896억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고보조 없이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시의회의 의결로 서울시는 380억원만 집행하고, 7년이 지난 지금 2002년 이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기간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지정문화재 복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2월 서울시와 문화재관리국간에 이루어진 풍납토성복원대책협약에서 총 공사비 896억원의 18.6%에 해당하는 복원비 167억 5,000만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추가예산 편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풍납2동 강변현대아파트에서 풍납1동 동아한가람아파트까지는 다른 구간에 비해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송과구청에서도 서울시에 수차례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이미 풍납1동 동아한가람아파트에서 천호대교의 구간에는 '97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놓고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천호대교에서 암사아파트까지만 사업비 7억 3,000만원에 방음벽 설치계획이 잡혔을 뿐, 잠실 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은 물론, 설계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구에 대한 방음벽 설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왜 이 구간만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울러 이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내년 예산에 책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議長 金箕英; 끝으로 문교보사위원회 李東秦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秦 議員; 金箕英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교보사위원회의 李東秦議員입니다.

저는 지난 정기회에 이어서 두번째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의 희망

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환란으로 인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밝게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맞는 우리의 준비상태는 너무도 허술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만의 시민이 살아 숨쉬는 수도 서울이 새로운 세기를 희망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는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21세기의 수도 서울이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장굴뚝의 검은 연기로 상징되는 산업화의 시대, 하드웨어의 시대가 가고 환경과 문화와 정보화의 가치가 중시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준비부족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高建 市長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개발독재의 상징물인 불도저가 끊임없이 도시의 녹지 공간을 파괴하고 있는 곳, 70~8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수립되어 죽은 듯이 잠자고 있던 계획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나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여지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곳,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 "회색 도시를 푸른 녹색도시로"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속삭이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 파괴와 보전의 논리가 공존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순투성이의 해괴한 논리가 환상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도봉구의 초안산 근린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초안산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걸쳐 있는 전체 면적이 161만 5,546㎡에 이르는 근린공원입니다. 초안산은 이 지역 일대에 조선시대 환관의 무덤이 많이 있어서 初獻山 또는 招魂山이라고 불리었던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초안산은 예로부터 창골로 불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딧불이와 꿩과 다람쥐, 그리고 가재까지 서식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철 마르지 않는 약수터가 있어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바로 이곳에 골프연습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평화롭던 산자락이 파괴의 현장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도봉구 창1동 산 177-1번지 일대에서 진행중인 골프연습장 공사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3년 2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하여 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사업자는 도봉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도봉구가 신청서를 반려하자 이 사업주는 서울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아서 결국 98년 9월 14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이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환경파괴의 책임마저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현재 무려 5개의 골프연습장이 공원 시설로 결정되어 2개는 이미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는 공사중에 있고, 2개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의 근린공원에 5개의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서울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조금이라도 해 봤는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9년 4월에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보면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1개소의 골프연습장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안산 근린공원처럼 하나의 공원이 2개 구에 걸쳐 있고 각 구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행정구역당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공원 안의 골프연습장 설치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동안 각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골프연습장을 허가함으로써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초안산 골프연습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의 당초 조성계획에는 골프연습장 진입로가 인근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계획을 바꾸어서 녹천역에서부터 예정부지 인근까지 이미 조성된 주민의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진입로의 개설은 6,000여 평에 이르는 골프연습장 부지 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함께 도로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폭을 넓히고 산등성이를 절토하여 필연적으로 초안산

의 생태계를 파편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는 편리한 기구를 통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 환경 당국의 모습임을 저는 천만 시민의 부릅뜬 눈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파괴적 행정은 골프연습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따르면 초안산 근린공원은 연장 1,440m, 폭 25m의 도로가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안산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1971년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계획도로 내의 4개의 터널구간은 개착식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동길과의 연결구간은 녹천역 지하차도 위를 지나서 아파트 숲 사이를 고가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초안산을 관통하여 아파트 숲 사이를 달리는 고가도로, 아래로는 지하차도, 뒤로는 국철이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모습은 현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나 볼 수 있는 해괴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초안산은 5개의 골프연습장과 함께 더이상의 공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환경파괴 연습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교통수요가 없는 초안산 관통 도로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능력

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개발독재시대의 초기에 세워진 과거의 도시계획이 30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때로는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독재라는 과거의 망령이 서울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로개설비는 환경파괴에 쓰여지는 값비싼 시민의 혈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초안산의 환경파괴를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의 산등성이에선 지금도 포크레인인 유령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이 업은 아낙네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도봉구의 허파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오늘까지 61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골프연습장 건설을 중단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안산을 포함한 공원지역 내에서 도시공원법 개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가한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골프연습장 시설계획이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해서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여기에만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시장의 환경보전 의지가 실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환경과피와 예산낭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초안산 관통도로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울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市長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의 환경과피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훌륭한 환경기본조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초안산 근린공원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계획과 환경조례가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판단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市長 직속으로 가칭 지속가능위원회, CSD(Committee of Sustain Development)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미래를 위한 투자, 새천년의 서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교육은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서울시가 21세기의 서울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을 촉구하

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초·중등 학생수는 현재 18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9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과밀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중학교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2부제 수업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教育部가 97년 6월부터 2003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4차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학교와 학급규모의 적정화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학교규모를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학급 규모를 초·중·고 35명, 단 고등학교는 우선 40명으로 할 때 2003년까지 신설 소요 학급수는 4,882학급, 신설 소요 학교수는 153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수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히 천문학적 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한 개의 학교를 신설하는데 드는 예산만도 적게 잡아 300억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의 학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신설 예산의 경우 전액 教育部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 법 제4조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道인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

정이 되어 있고, 또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사실상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었고, 이에 따라 教育部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서울 시도 아직 이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취지로 볼 때 앞으로는 서울 시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 제3자의 입장에 설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520억을 이미 기채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시설비로 2,280억에 이르는 예산을 기채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비 확보를 위해 사상 유례 없이 3,000억에 가까운 돈을 기채했거나 기채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서울시가 더 이상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천년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의 보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

한 조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조항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제 100조에 의하면 매각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の 公有財産管理條例 제22조에 따르면 教育廳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만이라도 教育廳에 장기 대부하거나 분할 납부방식의 매각을 통해서 새천년의 서울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과밀학급으로 인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양대 자치단체로서 넓은 의미에서 공히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양 기관이 학교용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업무,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유관업무 전반에 관해서 협의 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사업의 중복을 피함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됨으로써 중앙부처들 사이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호배타적인, 그리고 책임회피적인 태도가 시정되는, 아래로부터 시정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高建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箕英;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宋台京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台京 議員; 오늘은 새천년 70일 전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새 날, 새 시대는 캘린더가 바뀌거나 연도의 단위가 새로워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서 아무리 정진한들 그 미래가 계속 어긋나기 밖에 더하겠습니까? 과거와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과 자성을 통해 어두운 곳, 부정부패와 결탁하여 잘못된 곳을 밝게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맞추어 2003년 새로운 천년과 함께 매우 뜻있는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市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고민해야 할 고통스러운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반부패 국민연대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올해 국제무역거래에서 뇌물을 제공한 상위 19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國會議員께서는 大統領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國會의 탄핵의결을 받고 있는데도 地方自治團體長만 직무와 관련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지방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1,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37%가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명령이 있다고 답했으며, 73%는 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 실무공무원만 징계받는 데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42%가 징계위원회를 도입해 단체장의 잘못된 직무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大統領님의 지자체 감사 강화방안 강구 지시에 따라 관련법 개정 및 監査院 감사 등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와 무소불위적 월권행위로 소공화국을 이루며 행정난맥상을 보였던 자치단체장에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 및 정당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런 현상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직접 해 본 지난 의정활동 15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절망, 좌절, 무력감, 쓸쓸함, 서글픔, 비애를 느끼며 매우 작고 왜소하고 보잘 것 없는 나를 발견, 확인하는 것만이 전부라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떨구어집니다.

그래도 다 타버려 바닥을 드러내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심경과 자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힘으로 일어선 자 힘으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발길이 끊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힘있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시중의 말도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현직의 힘으로 밀어붙인 탕크주의는 시효가 지나면 꼭 밝혀집니다.

지난 일요일 모 방송국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여순사건의 진실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좌익활동도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을 "이제야 말해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면 더욱 진실되고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議會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市長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市長의 권위는 議會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바로잡아가는 솔직담백한 업무자세에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市長에 대한 믿음과 권위가 소리없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금고 선정은 무효입니다. 선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검증받은 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금고 지정 신청요령을 보면 심사위원회를 총 11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10명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기본규칙을 위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에 구성한다고 해 놓고 접수 마감 15일이나 지난 후 추천 의뢰하여 市議會는 9월 2일에 추천하기도 하여 심사기준을 위배하였습니다.

셋째로, 서울시의 심사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보면 市議員 추천공문에만 시금고 선정계획을 밝혔고 타 기관에는 "시정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 관련이 아닌 시정 주요정책이라고만 표기하여 관심사항과 전문성이 다른 위원이 선정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장 추천은 공문서 발송은 커녕 市 출입기자단 1진 간사와 구두협의 하였다고 本議員에게 제출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

고도 보도자료에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추천을 명기발표하여 몇 기자와 대화한 결과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금고 선정 발표시 기자들의 질문에 심사과정의 부족함을 시인하여 언론은 일제히 특혜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써서 시금고 선정은 다시 한 번 멋대로 행정의 복마전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3월 29일 입찰 설명 책자에서는 크게 8개 항목의 심사사항과 개괄적인 점수만을 발표하였고 심사기준표는 접수마감 1개월 전인 7월 3일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금고업무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알면서도 제안서 작성 완성단계인 막바지에 발표하여 기존 은행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며, 이때 세부항목 점수는 알려주지 않아 특혜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6년 6회에 분할 출연하는 것이 심사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8일 08시 은행관계자들을 불러 2차 면접을 실시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요구한 2년 이내에 조기 집중 출연금 가능성을 타진하였는데, 이는 심사기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월권행위이며 불공정행위입니다.

여덟째, 20점으로 시금고 선정에 결정적인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에서 한빛은행보다 95억여원을 더 내겠다라는 것 등을 가볍게 처리한 결과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겠습니까? 아홉째,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10점중 1/2을 차지하는 은행 지점 현황은 변별력이 없는 항목인데 5점이나 준 것은 또 다른 특혜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세금을 낼 때 꼭 한빛은행에만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무 은행이나 내면 되는 것이며 시금고는 집계기능만 갖는 것입니다.

선정회의록을 보면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대우채권으로 인한 제반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평가시 감안하기로 만장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5조 4,000억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3조 7,000억원의 대우부실채권이 있다는 한빛은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였습니까? 금고운영의 수익성 20점 중 금리수준에 10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모순입니다. 서울시 자금의 평잔을 보면 구금고까지 합쳐서 2조원 정도인데 이중 공금예금의 비율은 5% 정도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정기예금과 고려하여 배점되었는지 상세배점표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5년계약은 특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면 5년은 되어야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되었을 때도 투자금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타 은행을 두둔하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전산비용 등 투자비용은 신용보증기금 출연만 없으면 1년이면 상쇄시킬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을 더 걷기 위해 전무후무한 5년이라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엉망입니다.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서울시는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어설픈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시간이 없어 많은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진실을 밝혀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주경기장 감리사 선정의 불법성 등은 지혜를 짜서 재임중에 꼭 해결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초과에 대해 사과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箕英;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7分 會議中止)

(17時 46分 繼續開議)

○議長 金箕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高建 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高建;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金鍾來議員님, 閔庚燁議員님, 李東秦議員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市長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鍾來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金鍾來議員님께서 하천관리대책과 관련 하여 하천복개지상의 유진상가를 철거하여 하천을 원상회복하고 청계천

도 청계고가도로의 수명이 다하는 시기에 복개구조물을 철거해서 원상회복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金鍾來議員님께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 우리 市의 하천관리는 주로 치수차원에서의 하도 정비, 그리고 하천주변의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해서 하천을 복개위주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재생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해 나가는 사업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연생태 복원계획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서울의 상징이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강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서울의 앞마당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의 자연형 호안, 생태의 통로, 그리고 습지생태공원 등을 조성해서 한강의 생태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한강 지천인 불광천, 홍제천, 난지천을 자정능력을 갖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진상가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유진상가는 70년대를 전후하여 하천주변의 무허가건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건물로서 이와 같은 하천복개지상의 상가아파트가 현재 우리 市에 11개 동이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이들 노후건물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성북상가 OB동은 먼저 철거해서 하천에 원상회복을 유도하기로 했고, 유진상가와 같이 정밀진단 결과 부분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에 철거를 유도해서 하천의 기능을 원상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계천의 원상회복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차원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市의 심각한 도심교통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철거해서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의 특정 자치구 집중문제와 관련해서 저소득시민이 노원, 강서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으므로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자치구별 분산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이 집중된 자치구를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정교부금 선정시에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서 건설비용의 85%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89년부터 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4만 5,800호를 31개 단지에 건립해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당시에 서울지역 내에서의 택지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강서, 노원구 등 일부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편중되어서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편중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에는 종래와 같이 대규모단지보다는 소규모단지에 분산 건립해서 저소득시민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택공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2002년까지 건립중에 있는 약 1,000호의 영구임대주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산해서 건립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건립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의 슬럼화 현상,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제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대책을 종합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閔庚燁議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市長의 일정 중에서 30%가 행사참석인데 행사보다는 행정을 더 중요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당연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市長 취임 이후에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오히려 시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행사에만

참석한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市長의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어느 분야의 시정수행에 지장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 저는 못 느꼈고, 그런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지장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市長의 행정수행의 70% 이상은 문서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만나고, 시민과 대화하고, 시민과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市長이 수행할 행정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하는 행정은 30% 이내, 아니 10% 이내로 저는 감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閔庚燁議員님께서 역시 지적해 주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市長에 취임한 이후에 신설한 위원회는 그때 당시에 절실히 필요했던 위원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市政改革委員會입니다. 1·2단계 구조조정 끝나고 폐지했습니다. 두번째는 서울産業振興對策委員會입니다. 그 동안 서울에는 산업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형 신산업정책 수립해서 그 보고서 내고 그 위원회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신설한 위원회 중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마 노숙자대책협의회일 것입니다. 노숙자대책협의회는 노숙자 대표까지 노숙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이러한 민간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아직 우리 노숙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대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숙자대책협의회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중요

한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가 뭐냐, 나머지 위원회가 92개예요. 제가 취임해 보니 9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92개 위원회라는 것은 전부가 다 조례 아니면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은 통합하고 폐지해야겠다,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폐를 통해서 92개 위원회가 있던 것을 26개 위원회로 통폐합 해버렸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66개 중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앞으로 중앙정부에도 얘기해서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는 어느 부처, 어느 시·도보다도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실·국별 책임경영제 운영에 관해서는 그 동안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서 실·국별로 조직과 정원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또 사업집행과 예산의 연계성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직, 예산 등 시정운영 전반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예산편성시에 실·국장이 소관 예산을 책임지고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요구액이 전년의 요구액보다는 18.7%나 줄어들게 된 것도 역시 실·국별 책임경영제의 효과가 나타난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실·국별 책임경영제가 시정에 있어서 책임행정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은 계기가 된 것은 확신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제도가 바뀌자마자 100% 효과가 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공직자의 관행과 사고가 제도에 맞게 변화될 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실·국별 책임경영제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가면서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저밀도아파트 건축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제2롯데월드 건축을 중단시킨 후에 교통량 재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서 롯데측과 이 일대에 대한 교통개선 도로시설 협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잠실지역의 교통혼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밀도아파트 건축에 대한 규제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소형 평형 30% 건립의무화 문제는 현재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에 소형 평형이 전체 아파트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되는 아파트지구에도 여러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미 지난 96년 11월에 주민대표들과 서울시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30%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 녹지 등 공공용지 등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단지조성 주체인, 즉 건립주체의 부담으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문제에 있어서는 구릉지와 한강변의 경관을 고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경우에 270%의 용적률이 적정하다고 하는 市政開發研究院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당시에 주민들과 합의했던 사항인 것입니다.

합의한 대로 기본 용적률을 270%로 하고 공공용지의 추가 부담과 소형 평형의 추가 확보에 대해서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한 교통량 재조사에 대하여는 어제 金成奎議員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때에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잠실4거리의 도로 입체화방식의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고가차도 건설과 동서측 지하차도, 남북측 지하차도 건설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잠실4거리 구조개선 기본설계를 98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실시를 했고 이에 따른 기초적인 교통상황의 파악을 위해서 98년 12월에 교통량 기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입체화방식이 당초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의결된 고가차도와 다르게 결론이 날 경우에 사업주가 교통량 재조사를 통해서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량 재조사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롯데측과 교통개선 도로시설 재협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도로입체화방식이 당초의

고가차도와 다르게 결정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의결되는 교통처리대책이 기존에 협약된 내용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재협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는 입체화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약을 제기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잠실지역 교통혼잡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잠실교차로 입체화계획 외에도 잠실아파트 북측에 이면도로 개설과 성내천 복개도로 신설 등 주변가로와 교차로 개선사업을 병행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교차로의 입체화방식이 결정되면 이에 따르는 도로구조의 개선 등과 같은 시설개선사업을 역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현재 동대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를 잠실 송파지역에도 적용을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市가 중점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진상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소신있게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오해나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行政2副市長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來議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잠시 빠진 사항이 있어서 첨가하려고 합니다.

저소득 주민의 집중으로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배분 때 가산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면, 강서구와 같이 저소득 주민이 밀집된 자치구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95년에 이미 저소득가구 1가구당 소요 산정액을 159%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크게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1가구당 소요산정액을 상향 조정해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가산을 적용 등의 방안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계속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東秦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東秦議員님께서서는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중단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都市公園法施行規則 개정에 임박해서 인가된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할 것,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조속한 변경을 촉구하셨습니다.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초안산 관통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발정책 등에 환경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가칭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李東秦議員님께서 녹지보전,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건립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87년에 建設交通部에서 장기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주가 골프연습장,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都市公園法이 개정되면서부터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안산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건설은 적법하게 허가가 돼서 지금 현시점에서 중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도봉구가 패소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실시 인가를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취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市나 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변지역의 녹지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都市公園法施行規則이 개정된 지난 99년 4월에 임박해서 인가가 나간 골프연습장은 물론 도봉구 창동지역 1개소입니다만, 사실상 이곳은 이 법이 개정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97년 3월에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안산공원을 관통하는 월계로와 창동간의 도로개설 문제는 최근 인근의 택지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이 주변이 경원선철도, 중랑천 등으로 인하여 지역여건상 연계도로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월계로 등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노선이 초안산 근린공원을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복토하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環境部와도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속가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市에서는 이미 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95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정책이나 계획 등이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서울지속발전위원회로 확대 재편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니다.

또 李東秦議員님께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장기대부나 분할납부방식으로 매각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용지 문제를 비롯한 청소년 관련업무 등에 관해서 市와 敎育廳이 보다 긴밀한 정책협의를 해 나갈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李東秦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은 현재 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와 교육청이 21세기 서울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 현재 우리 市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 학교용지로 지정되었거나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예산은 총 31개소에 38만 6,000㎡입니다.

이 학교용지는 당초 宅地開發促進法에 따라서 매각을 전제로 하여 확보된 토지로서 매각처분을 해서 각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유 학교용지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식과 장기대부와 관련해서는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방식은 현재도 市 公有財産管理條例에 의거해서

가능하고, 또 이에 따라서 분할매각 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대부 방안이나 무상양여 방안 등은 地方財政法에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와 교육청은 현재도 학교용지 문제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 보호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箕英 議長, 李聲九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仁鍾 教育監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劉仁鍾; 존경하는 李聲九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鍾來議員님과 李東秦議員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정책 관련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來議員님께서 요즘 많은 유능한 교사들이 공직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기저하 및 교육 포기교사들의 증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시행된 정년단축은 일선 학교에 계신 원로 중견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무력감마저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일한 노후대책수단인 연금관리기금의 안정 운영 어려움으로 향후 연금액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교육개혁이 긍정적이고 또 교단경험이 많은 일부 유능한 중견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으며, 교원조직이 세대간 균형이 깨져서 교육이 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사기가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단을 경시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고 그런 전제하에서 첫째, 교사의 교육적 사명감과 자발적 성취욕구의 고양을 최우선 선결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전제하에서 교육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확립운동을 각종 시민단체, 언론매체 등과 함께 범사회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둘째, 명예퇴직자 감소를 위해서 연금관리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 신뢰차원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 동안 성실하게 연금부담의 의무를 다한 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리가 최대된 보장되도록 한다는 教育部와 行自部長官간의 합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인 연기 등도 教育部에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李東秦議員님께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문제와 청소년 관련업무,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의 유관업무 전반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議員님께서 평소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또 격려해 주신 데 대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용지 확보와 결식아동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을 이끌어가면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많은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업무협의체 구성문제는 현재의 업무협의 방법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하여 주시는 李東秦議員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行政2副市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2副市長 金學載;

閔庚燁議員님께서 유진상가아파트를 보수하면서 주식회사 신성에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가 전면동은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4층 이상은 철거가 되고 3층 이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내부순환도로 건설로 철거하고 남은 아파트의 2·3층을 우리 市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 밑에 1층은 상가로서 소유는 주식회사 신성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도 신성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 건물은 건축한 지 한 30년이 지나고 1·2·3층이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썩 우수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층, 3층의 우리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특히 배관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닥이자 1층에서는 천정인 슬라브를 뚫고 또 슬라브와 천정 사이에 우리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해체해서 배관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입주상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 1개월간 상인들 대표와 어려운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협약 결과 공사시에 천정공사에 따른 영업의 일시중단, 또 건설자재의 적치와 운반 등 작업통로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또한 관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신성이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수의계약의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회의 지역구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몹시 격앙된 상태였지만 어려운 중재역할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豫算室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室長 卓秉伍; 企劃豫算室長입니다.

閔庚燁議員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자치복권 발행과 관련해서 99년 9월 현재 자치복권 전체의 수익금이 222억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판매되지 않고 버려지는 인쇄비가 54억원이며, 미판매분의 폐기율이 98년도에도 78%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폐기하

지 않는 복권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발행시부터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의혹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연간 수입액이 20억원에 불과한데도 1,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다, 따라서 예산·행정낭비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자치복권 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자치복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은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당시부터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권발행과 판매업무는 行政自治部의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조회에 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판매복권의 폐기에 대해서는 미판매복권은 97년에 5,040만 5,000매로서 총 발행액 9,200만매의 65%입니다. 98년에는 1,725만 1,000매로서 총 발행액의 42%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량을 수거해서 폐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와 복권인쇄업자간의 결탁의혹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권인쇄업체인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는 90년도부터 엑스포복권·주택복권·체육·기술·복지·기업·관광복권 등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즉석식 복권을 인쇄하고 있는 복권인쇄 전문업체로서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와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자치복권 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복권을 발행한 후 99년 9월 15일까지 조성된 수익금은 22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IMF 이후 경기침체와 금융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서 복권시장이 위축되어 자치복권 뿐만 아니라 모든 복권판매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복권의 구매성향이 고액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식 복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치복권은 즉석식복권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치복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는 行政自治部와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회차별 발행규모를 타 복권보다 적게 발행하면서 발행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발행하는 등 판매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수익금 배분은 1,000억원 조성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는 각 시·도에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던 종래의 수익금 배분제도를 우리 市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치복권은 우리 市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1,000억원 목표달성을 할 때까지 배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는 발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두 번 회의 때 가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 매년 조성되는 수익금의 50%는 각 시·도별 판매실적,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1,000억원의 조성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제도 개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제도개선

을 통해서 계속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서울시의 수익금이 적기에 많이 배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崔在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金鍾來議員님께서 서울시내 터널의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중에 남산3호터널의 경우에 중성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보수보다는 전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 터널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산3호터널의 경우는 지난 96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는 결함이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콘크리트 중성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지난 9월말까지 모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24억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면 철근이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콘크리트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남산3호터널의 중성화는 두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천장 부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두 군데는 모두 완벽하게 균열 부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상 전체적으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면보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다른 터널의 경우에도 지금 중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철근이 부식되는 것까지는 발전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난 5월 1일자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시설물들이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모두 97개 시설이 이관되었는데 그 중에 27개 시설이 도면 없이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도면 없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가 97개 시설물을 인수받았는데 그 중에서 구에서 도면을 같이 넘겨주지 못한 것이 2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개구조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市에서 직원들을 보내서 그 중에 9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면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18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을 못 찾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도 문서고까지 가서 조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 모두 도면을 새로이 복원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産業經濟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林載五; 産業經濟局長 林載五입니다.

閔庚燁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상가 활용과 관련해서 91년도 1월에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에 3월달에 신지식산업센터로 활용계획을 변경하였고, 99년 4월에 자연하천 복원을 위해 유진상가를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등 방침이 수시로 변경된 사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 활용과 관련해서 97년 4월에 서대문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노인문화교실과 건강·스포츠시설들이 입주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89년 11월부터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3월에 서대문구에서 다시 노인복지회관 추진상에 어려움과 노인복지회관 완공 후에 관리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서 IMF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동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신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다시 이 계획을 수용을 하고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진상가 철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 유진상가와 관련해서 전면철거 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金鍾來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99년 3월에 지상권 존속기간 30년이 도래된 하천복개지상의 상가,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서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지상권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철거하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은 사용 가능한 경우에 보수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99년 4월 1일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였습시다만 언론을 통해서 유진상가를 비롯한 하천복개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4월 7일 기자설명회에서 앞에 밝힌 바와 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지상권 연장을 불허하고 철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경우 보수해서 내구연한까지 사용토록 한다는 당초 방침을 재차 밝힌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閔庚燁議員님께서 다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2만 2,000여 평의 대형물류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기존시설과의 중복투자, 과잉공급은 아닌지, 또한 대규모 유통시설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장 주변에 건설된 유통시설들이 중복투자나 과잉공급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물류센터는 은평·서대문·마포구와 종로·용산구 일부 등 약 100만명의 서북권지역 주민들이 현재 농수산물 공급 서비스를 대부분 낙후된 재래시장에 의존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총 84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70%인 약 600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약 1만 5,000평을 확보해서 1만 2,000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물류센터 내 주요시설은 농수산물 집배송장, 직판장, 소포장가공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등과 필수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공시에는 서북권 농수산물 1일 총 소요량 1,315톤의 약 47%에 해당하는 630톤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기본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도소매 병행의 유통센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기능으로서는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 및 정보처리 등 물류센터 본연의 물류활동 기능을 들 수가 있고, 도매기능으로서는 대량소비처인 슈퍼, 소매상 등 수요처를 대상으로 예약주문방식에 의해서 도매 공급하는 거래방식이고, 소매기능은 집단급식소, 대규모 음식점 등 다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개별소매 직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암지역에 들어서는 유통시설간 기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와 마포시장과의 관계입니다. 물류센터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북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수산물 물류기능과 도매를 위주로 하면서 일부 소매기능을 수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포시장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형태로 소매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이용권역, 주이용고객, 그리고 거래방법과 기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내의 대형할인점과 마포시장의 경우의 기능을 비교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은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차원에서 관광객과 동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필품, 공산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산물을 소매하는 마포시장과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포시장에서는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의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데 비해서 할인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산품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가 식료품 매장으로서는 백화점 수준의 규격포장화된 상품을 판매 취급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품질과 규격면에서 서로 다를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북권 물류센터와 마포농수산시장, 월드컵주경기장 내의 대형매장, 이 3자간의 주요기능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소매기능에서 중복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기타 관계기관, 전문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유통시설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포 농수산시장의 경우에는 타 기능으로의 전환을 마포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설 상암택지지구 개발과 아울러서 접근도로망 확충 및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종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암동 물류센터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도 상암지구 교통대책의 큰 틀속에서 수립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 물류센터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閔庚燁議員님께서 다시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유류기지를 82년부터 한국석유공사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재산임대료를 징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전시에 이전비용 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한 석유비축기지는 비상시 수도권 민수용 유류저장을 위해서 5만 7,000평 부지에 31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마포석유 비축기지는 76년 9월 26억원의 국고보조로서 서울시가 건설해서 79년 시설물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부지는 비상시에 서울시민에게 유류공급을 위한 국가안보시설임을 감안해서 地方財政法施行令 부칙 제4조에 의거해서 한국석유공사에 매 3년단위로 무상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공원조성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석유비축기지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전부지는 보안상 차폐가 가능하고 주택이 없는 지역으로서 이전조건에 맞는 약 3만여 평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물색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전비용은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산업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협의시 우리 市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文化觀光局長 金承珪입니다.

閔庚燁議員님께서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일정과 국가지정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의 18.6%에 해당하는 복원비 167억 5,000만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 이유, 또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 추가 예산편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풍납토성은 63년 1월 21일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초기 백제시대의 유적으로서 원래 총 연장은 4km였으나 을축년 대홍수 등으로 인해 완전 멸실된 1,920m와 78년까지 기 복원된 446m를 제외하면 잔여 복원구간은 1,634m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市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454억원, 2002년 442억원 등 총 896억원이 소요되는 총 복원사업계획을 세우고 97년까지 시비 38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만 3,500평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우리 市는 補助金の豫算및管理에關한法律施行令 제4조에 근거해서 총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 요청하였으나 88

년 9월 담배소비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서울시장과 경제기획원장관 간의 합의로 인해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토지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98년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의결됨에 따라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또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26일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복원공사비 167억 5,000만원은 국가에서, 또 토지 등 보상비 348억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대안을 문화재청에 제의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총 지원비에 대한 공식적인 확답은 없었으나 우선 금년도에 국비 4억원은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의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 등 보상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유적지 훼손을 방지토록 하면서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都市計劃局長 邊榮進입니다.

都市計劃局 소관으로 金鍾來議員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한 시정의 어려움을 이해

하시면서 대책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규모와 소요비용이 엄청나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만을 따져보더라도 면적으로는 약 1,500만평이며 소요예산도 적게 잡아 약 11조가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와 공원입니다. 민원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하는 경우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역시 신중을 기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市로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대책을 확정짓고 建設交通部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이에 맞춰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市 재정형편에서는 금리 6%를 상정하는 경우 연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정부담도 줄이고 동시에 시민불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주신 자치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교부금 배정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원 등의 방안도 사안에 따라 우리 市 재정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都市計劃局長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建設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建設局長 張錫孝입니다.

閔庚燁議員님께서 올림픽대로변 풍납동지역의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방음벽 설치요구지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125개소를 선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3개 지역의 방음벽을 시공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37개 학교주변 방음벽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과 설계가 완료된 4개 지역의 방음벽을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은 지난 97년 10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방음벽 설치가 타당한 지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방음벽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梁甲; 住宅局長 梁甲입니다.

金鍾來議員님께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설계구역 현황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현재 서울시는 총 93개 구역 15.86km²가 도시설

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중 도시설계를 작성 완료하여 운영중인 구역은 77개 구역입니다.

95년 이후 자치구에서 작성한 65개 구역에 대한 도시설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73억원으로 도시설계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 5월 9일 개정된 建築法施行令에서 도시설계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대상규모는 총 161개 구역 126km²로서 도시설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 8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야 할 대상지역은 2000년 5월 9일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지정 후 2년 이내에 도시설계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만, 대상규모가 너무 과대하고 또 도시설계 용역비 등 소요비용 부담이 커서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또 작성해야 할 기간이 너무 짧아 경험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담당부서의 능력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 19일 建設交通部, 서울시 市政開發研究院, 도시설계위원, 도시계획위원, 자치구 도시설계 용역회사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개정 건축법에 따른 도시설계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토론결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등은 구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 작성기간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도시설계구역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또 함께 참여한 建設交通部 관계자도 공

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 내용대로 건축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市의 경우 의무구역 지정대상 126km² 중 85%에 해당되는 108km²가 구역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상보다 상당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 월드컵主競技場建設團長 秦哲薰입니다.

閔庚燁議員께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중간점검결과, 그리고 향후에 또 얼마나 많은 설계변경이 있을 것인지, 예산은 또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이런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6일 기공식을 한 이래 많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관람석 철골공사와 PC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오늘 현재 공정률은 21.5%입니다.

閔庚燁議員님께서 염려하신 공사기간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결과 금년말까지는 관람석 철골공사를 완료하게 되고, PC 스탠드는 30%를 설치하게 돼가지고 당초 목표대로 전체 30%의 공정을 이루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말까지는 PC 스탠드공사를 완료하게 되고 지붕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말이면 전체 공정의 73%가 진행되게 되고 경기장 전체의 윤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말에 완공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대회가 열리는 2002년에는 개막전이 2002년 6월 1일입니다만 1월부터 5월까지 시운전과 시범경기를 해가지고 FIFA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정관리를 하고 공사 품질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경기장 건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비는 2,000억원이고 책임감리 등 공사부대비가 9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閣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장 대지면적 확장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지면적은 당초 기본설계 당시 서측에는 석유비축기지가 있고 또 남측에는 기존도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4만 6,000여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잠실종합경기장은 대지가 10만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경기장 대지 내에 여유공간 확보와 주변 자연지형과의 조화를 위해서 석유비축기지와 남측 도로쪽으로 약 2만평 정도의 대지를 착공 당시부터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대지의 조경공사비와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63억원의 내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비 증액요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의 조정요인을 예측해 보면 앞으로 사후 활용시설에 대한 지

하층 부분에 주차장 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연맹 FIFA의 초청인사들이 대회때 공동영접소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과 보도시설에 대한 FIFA의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따른 세부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소요 예산도 이미 책정된 공사비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잔액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증액요인을 억제하고 공사비의 증가가 없도록 노력하겠고 투명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끝으로 教育政策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政策局長 金炳哲; 教育政策局長 金炳哲입니다.

金鍾來議員님께서 그 동안 학교의 교육질서가 유지돼 온 요인 중 선생님들의 회초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현재 회초리가 사라진 교실은 무질서가 속출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적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교직을 회초리라는 뜻이 들어 있는 교편이라 이르기도 하고,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라 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체벌은 손쉬운 지도방법일지는 몰라도 학생의 인격손상,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무의식적 폭력학습 등

비교육적 측면이 많아 민주화시대인 오늘날에는 지양해야 할 학교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教育廳에서는 初·中等教育法 입법취지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허용하되 다만, 감정에 치우쳐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체벌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체벌 대체 모형으로 푸른교실, 학생생활 평가카드제, 모범학생장제, 학부모 책임지도제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기법에 의한 학생과의 대화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벌관련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학부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教育廳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학칙운영과 학생 기본생활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해이해진 학생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金鍾來議員님께서 재학생 중 서울 이외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감소대책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급학교 진학시 타 시·도 거주자라 하더라도 初·中等教育法施行令 제81조에 의해 지원자격을 부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재학중인 학생이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교육환경이 좋은 현 재적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원할 경우 初·中等教育法施行令 제89조에 의해 이들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의한 서울시 소재 학교로의 전학에 대하여는 실 거주지 조사 등으로 철저히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전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04分 散會)

○出席議員 92人

吳尙俊	朴正哲	金成浩
宋台京	崔忠敏	李健相
鄭鉉均	金恩京	金在實
金判吉	金興植	朴來雨
宋美花	柳辰永	金寬洙
金成奎	金星煥	徐興善
李海植	趙相勳	鄭圭鎭
韓春子	林浩植	趙養鎬

金善會	金泰潤	金奇德
羅鍾文	李東秦	金魯珍
金俊明	任東淳	任元彬
崔榮壽	咸泰浩	金明洙
任安淳	河海鎮	金聖泰
李政恩	金鎬一	黃乙秀
洪淳喆	韓鳳洙	李松竹
金平城	尹汝亨	李敬愛
朱世晚	金吉原	閔庚燁

申垆植	呂鼎九	梁敬淑
이금라	李善宰	張夏雲
鄭韓植	金鍾來	李成浩
車星煥	劉俊相	洪承采
盧永奭	車元甲	趙成大
李亮漢	張鎮國	林東奎
李英順	劉大運	李康珍
閔鍊植	李容富	朴洙桓
李康玉	鄭在天	高溶振
具哲會	金洛淳	金周喆
鄭泰宗	金玉源	金喜甲
朴謙洙	李禮子	崔鍾午
崔鍾德	吳世根	李載震
金箕英	李聲九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

市長 高建

行政2副市長 金學載

企劃豫算室長 卓秉伍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崔在範

產業經濟局長 林載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建設局長 張錫孝

住宅局長 梁甲

월드컵主競技場

建設團長 秦哲薰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監 劉仁鍾

教育政策局長 金炳哲